

김정은 시대의 중장기 경제 정책 변화 전망

양 문 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경제문제는 커다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 절박함은 충분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수단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 북한에서 경제문제 해결은 경제의 영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도 경제문제를 제대로 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난제 중의 난제이다. 후계자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을 전망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혁·개방 문제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성년 민심을 달래주어야 하는,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더욱이 후계자가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절박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먹는 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제난 해소의 방안은 포괄적으로 보아 개혁·개방 이외의 대안은 존재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최근의 현지시찰에서 “총알보다 식량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반면 큰 틀에서 보면 권력의 3대 세습은 개혁·개방과 같이, 정권 및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정책의 변화를 제약하는 최대 요인이다. 특히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의 원천이 세습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의 정책적 노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금은 후계구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의 큰 변화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결국 후계구도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은 유보한 채 기존의 정책 노선을 고수하거나 제한적·단계적 개혁·개방을 전개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후계구도가 안착한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특히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체제안전을 보장받은 이후에는 개혁·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나아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북한경제가 항상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당분간 경제난 완화의 열쇠는 대외관계가 쥐고 있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 주변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사실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북한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북중경협을 확대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물론 방향성은 뚜렷하다고 해도 속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경제문제는 커다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 절박함은 충분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수단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 북한에서 경제문제 해결은 경제의 영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도 경제문제를 제대로 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난제 중의 난제이다.

물론 그동안 북한정부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나타나듯 위기 극복을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의 관찰자들이 북한정부가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당국의 경제정책이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끊이지 않았다. 물론 북한 지도부로서는 대규모 외부자원 유입에 바탕을 둔 도약, 경제재건을 꿈꾸겠지만 현재로서는 안팎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장기화, 일상화로 인해 북한 사회는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했으며 이는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큰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현 시점에서 국가의 최대 당면 과제인 성공적인 권력승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경제강국을 축으로 하는 강성대국 건설을 약속한 2012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후계자 김정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일 · 김정은 권력승계기의 정치 · 경제적 여건

후계자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 지위에 있던 시절의 여건과 비교해 보면 자신이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되어 권력을 승계하기 전까지의 1974~94년의 정치경제적 여건과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어 권력승계에 착수한 최근의 정치 · 경제적 여건을 비교해 보자.

무엇보다도 1970~80년대는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치 · 경제 여건이 비교적 안

정되어 있었다. 이른바 냉전체제 속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열강인 소련, 중국의 보호를 받던 상태로서, 북한은 체제안전 문제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북한의 권력 엘리트는 큰 갈등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동요도 없는 상태였다. 당조직을 비롯해 국가 시스템은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외채문제의 발생,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한계성 노정 등으로 경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지만 ‘먹는 문제’를 고민한다든지 내부자원이 고갈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후계자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의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치·경제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우선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보호막은 없어진 상태이다. 물론 중국이라는 후견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과거 냉전시대 소련, 중국의 존재감에 비해 무게가 떨어지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련-중국-북한으로 이루어진 동맹체제는 현저히 약화된 반면, 미국-일본-한국으로 이루어진 동맹체제는 오히려 과거보다 굳건하다. 북한이 체제안전 문제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또한 현재 국내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북한의 권력 엘리트는 표면적으로는 큰 갈등을 보이지 않지만, 체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다소 동요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제위기로 산업기반과 계획경제시스템은 거의 다 붕괴되었고, 내부의 자원은 고갈된 상태이다. 만성화된 식량난으로 20년 넘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민심의 이반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위기의 장기화, 시장화의 진전 등으로 기존 질서가 크게 동요하고, 당조직을 비롯해 국가 시스템은 작동 불능에 가까운 상황에 처했다. 한편 후계자 김정일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후계 체제 안착 여부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후계자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되고, 이어 공식 지명되고, 권력을 실제로 승계하기까지의 기간, 즉 1974~94년의 경제정책은 크게 보아 본격적인 개혁·개방 이전의, 이른바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958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료로 생산수단의 국유화, 농업의 집단화가 마무리되고, 이어 1961년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도입, 1964~65년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의 실시로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고, 이는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물론 1970년대 이후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점점 크게 부각되었고, 이를 북한지도부가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도(道)경제지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부문별 경제관리체계에서 지역별 경제관리체계로의 전환 모색, 연합기업소 중심의 경제관리체계로의 재편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그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도부는 문제의 주된 원인을, 계획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일꾼들의 당성·계급성·혁명성의 부족, 상부의 지도·감독의 부족에서 구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와서야 개혁·개방의 싹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4~85년의 독립채산제의 강화, 8·3 인민소비품 창조 운동, 합영법의 제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1986년부터는 다시 보수적인 정책기조로 돌아섰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자 1990년대 초부터 다시 개혁·개방적 분위기가 부활했다. ‘개인부업’의 장려, ‘새로운 무역체계’의 도입,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경제특구)와 같은 일련의 정책이 취해졌다. 물론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매우 제한적인 개혁·개방적 조치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후계자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 1 : 개혁 · 개방

후계자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을 전망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혁 · 개방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개혁 · 개방의 정의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 정식화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보다 단순화시켜 경제개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즉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대폭적인 변경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의 이용, 혹은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 그 변경의 핵심요소이다. 다만 종래의 사회주의의 틀을 넘어서는 정도의 경제제도의 대폭적인 변경은 ‘개혁’ 이라기보다는 ‘체제전환,’ ‘체제이행’ 이라고 불리는 게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대외경제 개방은 다방면에 걸친 것이다. 이는 물자의 개방(무역), 자금의 개방(외자도입)이 중심이지만 인적인 개방(관광객, 기업관계자 등의 인적 교류), 그리고 외부의 문화(사상 포함) 유입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개혁 · 개방은 그 포괄범위와 수준이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속성을 지닌다. 물론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이 하나의 준거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중국, 베트남 수준의 개혁 · 개방은 본격적인 개혁 · 개방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후계자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본격적인 개혁 ·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몇 가지 주요한 변수가 눈에 띈다. 크게 보면 본격적인 개혁 · 개방을 촉구하는 요인과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전자를 살펴보자.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을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로 정했다. 지난 2010년의 제목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와 상당히 유사하다. 1998년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 이후 경제 분야를 신년공동사설 제목으로 제시한 것도, 그리고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한 것도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런데 지난 해 ‘인민생활 향상’을 기치로 내건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식량사정은 종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해 12월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주민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내화 및 외화를 상당 정도 몰수당하면서 소득의 대폭 감소를 겪어야 했다. 더욱이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면서 이른바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올해의 식량사정은 작년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난 민심을 달래 주어야 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현재 북한은 당면한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더욱이 후계자가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절박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먹는 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제난 해소의 방안은 포괄적으로 보아 개혁·개방 이외의 대안은 존재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최근의 현지시찰에서 “총알보다 식량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김정은이 경제회복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식량이 없더라도 총알이 없어서 안됐지만, 지금은 총알이 없어도 식량은 없으면 안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해 9월말 경 함경북도 김책시를 시찰했을 때의 발언으로서 노동당 간부들에게 배포된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제는 후자, 즉 개혁·개방을 억제하는 요인을 살펴보자. 큰 틀에서 보면 권력의 3대 세습은 개혁·개방과 같이, 정권 및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정책의 변화를 제약하는 최대 요인이다. 특히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의 원천이 세습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의 정책적 노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는 어느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우리에게는 명확한 노선과 방침이 있기 때문에 개혁이나 개편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잘못된 것도 없고 인민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다 지지하고 있는 만큼 개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야 개혁을 하지 다 잘 되고 있는 데 무엇 때문에 개혁을 하겠습니까”(1988년 1월)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아

버지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우리 당과 인민은 결코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1998년 5월),” “개혁·개방은 망국의 길이므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1999년 1월)”라고 역설한 바 있다.

실제로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경제 개혁·개방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인 이상으로 정치적 문제이다. 북한 지도부는, 경제개혁의 실시가 정치개혁의 실시로 파급·연동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러한 개혁은 일단 시작된 이상, 지도부의 예상을 넘어서 가속화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현재는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보호막은 사라졌고, 북한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체제의 존속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개방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한들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결국 본격적인 개방의 대외적인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은 후계구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의 큰 변화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결국 후계구도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개혁·개방의 촉구 요인보다는 억제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본격적인 개혁·개방은 유보한 채 기존의 정책 노선을 고수하거나 제한적·단계적 개혁·개방을 전개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후계구도가 안착한 이후에는 개혁·개방의 촉구 요인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다. 다만 이 경우 촉구 요인이 더 클지, 억제 요인이 여전히 더 클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서, 특히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체제안전을 보장받은 이후에는 개혁·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나아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후계자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 2 : 경제강국 건설

북한정부의 공식적인 경제정책 목표는 이른바 경제강국 건설이다. 국가 차원의 목표는 강성대국 건설인데 사상 및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은 이미 달성했으니

결국 강성대국의 건설을 위해 남은 것은 경제 분야뿐이라는 주장이다. 즉, 현 시점에서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적 요소는 경제강국의 건설이다. 그리고 북한정부는 강성대국의 건설 시점을 2012년으로 못박은 바 있다. 그런데 북한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십 수 년 동안 경제강국 건설을 소리높여 외쳐왔지만 경제강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제시한 적이 없다. 북한의 학자들이 몇 가지 경로를 통해 간단하게 밝힌 바를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조선사회과학원 리기성 교수는 당의 경제전문 잡지인 <경제연구>에 기고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현시기 경제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생산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경제강국 건설은 먼저 지난날 도달하였던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하고 다음에 그것을 능가하여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순차적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강성대국의 문어구에 이른 오늘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최고생산수준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 축성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되었던 1980년대 중엽의 생산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전력, 금속, 석탄, 세멘트, 양곡 등 모든 중요생산물에서 해방후 최고생산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9년 9월 중국 상해에서 열린 남북학술회의에 참가한 북한 학자들은 남한 학자들에게 자신들의 경제강국 건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리경철 조선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실장은 2012년까지 북한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경제가 최고조로 달했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87년의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1987년은 북한이 2차 7개년 계획을 사실상 2년 연장하여 완료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을 막 착수했던 시기이다. 그 때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해 리실장은 2천 5백 달러라고 밝혔다. 즉 2012년까지 북한이 달성하려는 매우 구체적인 목표는 1인당 국민소득 2천 5백 달러의 실현인 것이다.

이와 함께 2010년 9월말부터 10월 초에 북한을 방문한 와다 하루키 전 도쿄대 교수에게,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리기성 교수가 경제강국 건설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고 한다. 첫째, 과거 달성된 최고생산연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둘째, 정보산업시대의 요청에 부응해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일궈내 면모를 일신, 경제자립화를 꾀하고 현대적 기술을 도입해 경제 개진(改建)을 실현하는 것, 셋째,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한편 올해의 신년공동사설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경공업분야를 강성대국 건설과 연결한 것이다. 물론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 등 이른바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의 공동사설은 경공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으로 규정하고 더욱이 올해를 ‘경공업의 해’로 설정하는 등 경공업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사설은 경공업 발전을 위한 중간목표와 수단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의 생산의 정상화, ▲소비품 생산의 양적 확대 및 품질 향상, ▲소비품 생산의 현대화·과학화, ▲지방공업의 가동률 제고,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 자금에 대한 보장,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의 확대 등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지방공업과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이다. 지방산업공장이거나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은 현재 계획경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는 공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도부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이 올해 보수적인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시장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보수 일변도, 강경일변도의 경제정책을 펴지만은 않을 것임을 공동사설은 시사하고 있다.

중대규모 공장으로 이루어진 중앙공업의 비중이 압도적인 중화학공업이 아니라 소규모 공장으로 이루어진 지방공업의 비중이 다소 큰 경공업을 강성대국 진입 직전 해인 올해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한 것은 북한지도부의 고민을 반영한다. 실제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제조업 기반은 거의 다 붕괴되었는데 경공업보다도 중화학공업의 타격이 더 컸다. 고난의 행군 종료 이후 이른바 개진(改建)·현대화라는 명목으로 공장의 복구에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시

장경제의 확산으로 계획경제는 점점 축소되었고 경제내의 자원은 거의 고갈되었다. 결국 주민들에게 약속한 경제강국 진입의 시한은 다가오지만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중앙공업, 중화학공업이 살아나지 않는데 따른 교육지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현 시점에서 북한 지도부가 상정하는, 특히 주민들에게 보여줄 경제강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는 북한지도부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무어라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의 학자들의 최근 설명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생산, 특히 중요생산물에서 과거의 최고생산수준을 회복한다는 것은 일부 공장을 제외하고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인민생활 향상도 지방공업과 8·3 인민소비품 생산과 같은 일부 외관상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공허한 슬로건에 그칠 공산이 크다. 다만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라는 구호가 암시하듯이 자립경제와 정보과학기술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즉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그리고 대계도간석지 등과 같은 중요 건설대상, 그리고 몇몇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 그리고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CNC(컴퓨터 수치제어) 등이 경제강국의 표징이자 대표적인 성과로 선전될 가능성이 있다.

후계자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 3 : 대내외정책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후계자가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당분간은 안정적인 권력승계, 후계구도의 안착을 위한 내부 결속, 내부 단속에 최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에 올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대내적인 경제정책수단도 제약되어 있다. 북한의 공식매체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케케묵은 기존의 방식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는, 당분간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을 방임하는 정책이 유력한 카드이다.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시장을 허용하면 주민

들의 불만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간헐적으로 시장에 대한 단속, 통제 등을 통해 시장의 확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신흥부유층의 발흥을 억제하려고 하겠지만, 올해의 어려운 식량 사정, 흥흥한 민심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대해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기는 용이하지 않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북한경제가 항상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당분간 경제난 완화의 열쇠는 대외관계가 쥐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북중관계 강화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지원, 경제협력을 얼마나 획득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가간 관계가 강화되고, 미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양국간의 강한 연대가 공고화, 구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북중경협 확대심화가 하나의 추세를 넘어서 구조화하고 있다. 물론 북중경협의 한계성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핵 문제, 개혁·개방 문제 등 북한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빅 이슈에 대한 북중 양국의 근원적 견해차, 북한 지도부의 대중 불신과 경계심, 게다가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북중경협의 방향은 분명해 보이지만 속도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선에서 정리 가능하다.

다만 당분간 북중경협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기본적으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최대의 국가적 과제인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자원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게다가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획득이 절실히 요구되고 현재로서는 중국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여기에 중국은 최근 이른바 북한 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시키고, 북한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확대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상황이 자신들에게 ‘기회’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남북관계의 악화, 한미동맹의 강화 등을 배경으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확대 의사를 표명했고, 중국으로서는 이 기회에 북한, 나아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미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 주변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사실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북한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북중경협을 확대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올해의 신년공동사설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이용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밝혀 지하자원을 팔아서라도 부족한 외화를 보충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을 드러내었고,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대중무역 확대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며, 이 업무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인프라 건설, 농업, 전력, 석탄, 에너지, 금속 등 기초공업 발전, 지역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외자를 유치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해 초 경제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2010~20)을 수립했는데 이는 외자유치를 통해 농업, 철도·도로, 항만, 전력, 에너지 등 6대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고,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외자유치창구로 지정한 바 있다. 올 초에 발표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은 지난 해의 경제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을 계승발전한 듯한 인상을 풍긴다. 아울러 지난 해 대풍그룹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단 한 건의 외자유치도 성사시키지 못한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과,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등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統**